

야 “민영화 방지책은 꼼수” 여 “파업열차 당장 멈춰야”

민주, 철도사업법 ‘민영화 금지’ 조항 삽입 거듭 주장

새누리, 경찰진압 관련 “문재인 말바꾸기” 일제 공격

민주당은 24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KTX 차회사의 민영화 방지대책을 ‘속임수’라고 주장하며 철도사업법에 ‘민영화 금지’ 조항을 넣자고 거듭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특히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겸과 방식을 비판한 민주당 문제인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에는 경찰의 조기

투입을 주장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던 점을 살기시기면서 일제히 ‘말 바꾸기’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정부가 민영화 방지대책으로 정관 규정, 주식협약, 철도면허 발급조건 등을 내세워 ‘이 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자회사 설립비용 59%를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으로

조달한다는 점에서 민영화가 아니라 고 하지만 이는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투입 사업이 수익을 못 내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수서발 KTX 운송회사 정관에 규정하는 것은 국민연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민간 매각시 면허취소’라는 정부의 방침도 안전판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운석 의원은 “국토부장관은 조건부 면허 발급(민간 매각시 면허취소)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했지만 철도공사는 법무법인 자문을 받은 결과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현 원내대표는 “민영화를 안 한다며 민영화 방지 장치를 거부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철도사업법 ‘원 포인트’ 개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새벽 “철도 민영화 주장은 괴담”이라는 내용을 담은 ‘늑대가 나타났다’는 제목의 긴급 당보 12만여부를 제작해 전국 당협위원회에 배포했다. 또 코레일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도 적극 이슈화를 시도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과거 철도청을 공사로 전환한 철도개혁의 원조 정당”이라면서 “불과 몇

년 사이 입장을 180도 바꾸고 노조에 부회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경제의 피해를 막고 승객 안전을 고려해 철도노조의 파업열차를 당장 멈춰라”고 촉구했다. 윤 수석은 “문 의원은 과거 ‘불법파업은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 대화로 해결돼도 불법 행위에는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그때 말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국회와 노사정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파업 사태를 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전병현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사업법에 대한 한미FTA 조항 해석과 관련한 문건을 보이며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예결위는 증액 예산을 위해 약 8조원을 증액한다
는 방침이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의 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번 주부터 일부 증액 심사를 하고 있다.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가 요구한 증액 규모는 11조5000억원에 달한다. 상임위는 별도로 예결위 차원의 증액 요구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예결위는 앞서 삼감 심사에서 1조 4000억원 가량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감 심사에서 보류된 120여개 사업에서 추가 감액하거나 여야가 합의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예결위원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면 정부 지출을 더 늘리기는 어렵고, 삼감은 범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나 예결위의 증액 요구가 11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을 감안하면, 여야가 최대 3조원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증액 요구의 4분의 1 밖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여야가 증액 과정에서 정부의 설득을 끌어내는 작업도 간단치 않다. 감액과 달리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국회의 심사권이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무상보육 국고보조 인상과 초·중학교 교원 확충 및 급식지원

/연합뉴스

여야, 상설특검제 ‘제도특검’으로 가닥

별도의 조직·인력 갖춘 기구특검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

여야가 상설특검제 도입과 관련,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 특검’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제도 특검’으로 의견 접점을 이룬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 설치된 TF(테스크포스)는 상설특검과 관련, 정치적 의혹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특검’ 형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또 ‘특검추천위원회’를 여야 추천 각 2명, 법원·검찰·대변변협 추천 각 1명 등 7인으로 구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1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해서는 특별감찰관에게 ▲현장조사 ▲사실조회 ▲당사자 출석·

진술 등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증안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에 따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내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제적 3분의 1 이상의 의결로 특검 실시를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최소한 2분의 1 이상의 의결요건을 갖추고 국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법무장관에게 특검 도입을 요청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합의 또 무산

정부기관 출입·사이버심리전 금지 놓고 ‘팽팽’… 내일 다시 논의

여야는 24일 국회 국정정보원 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개혁 합의안 도출에 또다시 실패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간사 협의에 나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단독상임위 전환 등 국정원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힐지 못하고 오는 26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원 정보관(IGO)의 정부기관 출입 금지와 대선개입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사이버 심리전 기능 폐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정원 IGO가 모든 정부기관에 상시 출입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상시 출입제도의 일부 존치를 주장하면서 법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고 맞았다. 사이버심리전에 관해서도 민주당은

심리전 활동의 전면 폐지를 법제화할 것을, 새누리당은 입법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국정원 예산과 직무의 국회 통제 방안을 놓고 도 구체적인 수위에 대한 출마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 개입행위를 한 직원의 처벌 강화 문제는 구체적인 형량에 대한 의견차가 남아 있다

고 여야 간사가 전했다.

다만, 여야가 지난 3일 4차 회담에서 합의한 9개 입법·처리사항 가운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견해차를 좁혀 연내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다.

여야는 26일 오전 합의안을 도출하면 곧바로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오전 중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본회의를 목표로 국정원 개혁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15개 상임위 11조 늘려 달라

예산심사 ‘좁은문’

증액 사업만도 1700여건

확대 등을 위해 약 8조원을 증액한다
는 방침이다.

예결위는 증액 심사의 속도를 내고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협의 채널을 개방하고 있지만, 증액 요청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예결위는 앞서 삼감 심사에서 1조 4000억원 가량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 심사에서 보류된 120여개 사업에서 추가 감액하거나 여야가 합의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예결위원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면 정부 지출을 더 늘리기는 어렵고, 삼감은 범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나 예결위의 증액 요구가 11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을 감안하면, 여야가 최대 3조원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증액 요구의 4분의 1 밖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여야가 증액 과정에서 정부의 설득을 끌어내는 작업도 간단치 않다. 감액과 달리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국회의 심사권이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보육교사 쳐우개선·영유아 무료 접종 확대 등을 위해 증액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무상보육 국고보조 인상과 초·중학교 교원 확충 및 급식지원

/연합뉴스

쌀 목표가격 협상 결렬

농해수위, 내일 전체회의 열어 재논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에도 쌀 목표가격 인상안에 대한 결론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농해수위 내 6인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

서는 쌀 목표가격으로 17만4083원을 제시했다가 농민단체 반발로 17만9686원까지 인상한 정부의 안과 19만5091원을 제시한 민주당의 안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농해수위 내 6인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

서는 쌀 목표가격으로 17만4083원을 제시했다가 농민단체 반발로 17만9686원까지 인상한 정부의 안과 19만5091원을 제시한 민주당의 안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인 협의체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면서 관련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

면서 관계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선암동 전원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 150평~420평(분할·합병 가능)

현 토목공사 90% 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 세금 납부 완료)
4. 각 필지별 6m로 접

찾아오시는길

신문지구

영광 →

어등산 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 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2475-0933
010-5166-0013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임대 (병·의원) 임대

2층 : 양·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 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 | 062) 651-6581
의 | 010-3690-7790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